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사회 > 사회일반

경찰, 대북전단TF 운영..."접경지역 주민안전 보호차원"

서울청 대북전단 살포 예방 위한 팀 구성해
경비·교통 등 부서 참여...첩보 수집 등 활동
"접경지역 주민들 생명과 안전 보호 목적"

등록 2021-05-31 15:33:15

[서울=뉴시스]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, 소책자 500권, 1$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같은달 30일 밝혔다. (사진=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) 2021.04.3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정유선 기자 =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서울경찰청은 3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살포 자제를 설득하는 등 예방 활동을 위해 대북물자 살포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. 경비, 교통 등의 부서가 협업하는 차원에서 TF

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.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,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경찰 관계자는 "전단 등을 살포할 시 국민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"며 "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"이라고 전했다.

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~29일 비무장지대(DMZ) 인접 경기·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.

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나온 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장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"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"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ami@newsis.com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